

# 토 론 문

## 한국보험법학회 제1차 정책세미나

### 즉시연금 보험금 분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변호사 박기억 (2021. 9. 7.)

#### 1. (제1주제) 즉시연금 피해자의 일관구제제도 연구와 관련하여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강화 방안으로, 발제자께서는 영국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안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분쟁조정결정의 수용을 거부하는 금융회사를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훌륭한 조정결정이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성은 매우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임.

그런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조정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기존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에서 선택을 해 본다면, 금융분야에 가장 전문성을 갖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지. 조정결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발제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2) 발제자께서는, 한 사건에 다수의 민원인이 존재하는 보험분쟁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결정을 통해 민원인이 구제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민원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쟁점을 알지 못한 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금융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금융민원인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집단분

쟁조정제도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도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  
셨는데, 이러한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함.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지나치  
게 형식적이어서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데(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는 박탈당하는 사례가 많음), 이러한 문제는 자살 재해사망보  
험금 사건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음. 즉 책임개시일부터 2년 경과 후에 자살한 경  
우라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지만,<sup>1)</sup>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  
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임.<sup>2)</sup> 따라서 한 사건에 다수의 민원  
인이 존재하는 보험분쟁사건의 경우에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함.

## II. (제2주제) 즉시연금 1심판결의 법리검토와 관련하여

### 1. 생존연금월액의 산정기준과 방식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문제

(1)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은 상속연금형(만기형) 상품으로서(만기환급형 즉시연금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고,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인데,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매월 연금 지급 시 만  
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어 약관 해석상 매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음.

(2)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약관 해석에 관한 객관적·확일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불  
이익의 원칙에 따라 생존연금월액은 지급받은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  
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계산식, 즉 「순보험료 × 공  
시이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결국 약관 해석상  
매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고, 발  
제자도 같은 법리에 따라 ‘생존연금월액’의 의미를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것’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판결 등 참조.

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이유로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3) 이 부분은 즉시연금보험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결국 보험약관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보험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서 매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약관 해석에 관한 객관적·확일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일응 매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재원’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대상판결과 발제자의 견해에 찬성함. 다만, 보험약관이나 상품설명서가 아닌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겠음.

## **2. 산출방법서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개별약정의 성립 여부)**

(1) 매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보험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방법서’에는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산출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보험금 재원’을 위한 공제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됨.

(2)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산출방법서는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평균적 고객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약관에 이를 계산의 근거로서 밝혀야 함에도 이를 약관에 명시하거나 최소한 상품설명서에서도 이에 관한 언급이 없고, 나아가 이를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감독관청에 제출되어 승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발제자는 대상판결이 산출방법서의 계약 내용 편입과 관련하여 제시한 논거는 타당하

다고 하면서,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의 '지시문구'를 통해 산출방법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상품설명서에 예시된 금액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결과치라고 이해하는 것은 산출방법서를 접하지 못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가능하므로 이것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입장이어서 대상판결의 결론을 지지하고 있음.

(3)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대상판결이나 발제자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다만 약관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내용을 보험계약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의 법리에 따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표현상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

(4)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임(계약설).<sup>3)</sup>

그런데,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아니하는데,<sup>4)</sup>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거나(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에 없는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추가할 경우,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개별약정)가 있으면 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법리일 것임.<sup>5)</sup>

(5) 위와 같이 어떤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의사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명시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라도), **단순히 일방 당사자가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내용을 계약에 편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계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필

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등 참조.

요한 것이기 때문임.

(6)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연금저축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연금은 10년간에 걸쳐 3개월마다 1,821,380원을 계약해당일에 총 40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훼손되어 그 일부만이 제출된 이 사건 보험증권에 3개월마다 1,821,380원씩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는데(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대법원은 보험증권 중 훼손된 부분<sup>6)</sup>에 연금액은 1년 만기 정기에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보험증권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조차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대법원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매우 신중한 입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7) 이 사건은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 재원 공제’에 관한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보험약관조차도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물며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없는(따라서 대부분 교부되

---

6) 해당 보험증권은 3단으로 접히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보험증권 중 3단 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로 증거로 제출하였고, 연금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는 위 보험증권의 2단 부분에 있는 것임.

지도 않는) ‘산출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만기보험금 재원 공제’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임.

### 3. 생존연금월액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 - 약관 해석의 문제와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는 구별해야 -

(1) 보험자(피고)는 보험약관 및 가입설계서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생존연금액의 대략적인 액수 및 그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명시·설명하였고, 이 사건 상속연금형(만기형)의 생존연금액 산정 방식은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거나 보험계약자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명시·설명义务的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2)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상 생존연금월액이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 만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납입 보험료 전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점이 원고들에게 교부된 이 사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상품설명서의 생존연금월액의 예시 등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약관의 해석과 다른 내용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이 점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함.

(3) 발제자도 ‘생존연금월액’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중요사항으로 본 판지는 타당하다고 보면서, ‘생존연금월액’의 산정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러한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설명하지 않은 이상 보험자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4) 하지만, 약관 해석의 문제와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구별해야 하

는데, 위 논의는 양자를 혼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임.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sup>7)</sup> 이에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sup>8)</sup>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임.<sup>9)</sup>

따라서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제도는 일응 보험계약으로 편입된 내용(약관)에 관하여 비로소 생기는 문제이지,<sup>10)</sup> 아직 보험계약으로 편입되지도 못한 내용에 관하여는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매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재원’을 공제하는 내용이고, 이는 보험약관이 아닌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내용인데, 그렇다면 생존연금월액의 지급에 관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을 뿐이고,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조차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은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2018년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결정서(조정번호 제

---

7)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등 참조.

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등 참조.

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등 참조.

10) 즉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은 일응 보험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도록 하고, 만약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게 함으로써 약관의 편입을 통제하는 것임.

2017-17호)가 좀 더 정확하게 실시하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금감원 분조위는 위 결정서에서 “설령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산출방법서의 보험수리적 내용 모두를 보험계약자가 주지하도록 설명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은 그것을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실시함.

(5) 보험자가 생존연금액 산정 방식, 즉 매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명시·설명하였다는 주장은, 위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설명, 즉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는 정도로 선택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인식하고 이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단지 일방 당사자의 충분한 설명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이에 관한 발제자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Ⅲ. (제3주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소비자보호

대상판결이 약관의 해석문제와 약관설명 의무 위반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양자의 관계를 혼동하고 있다는 발제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함. 약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상법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상판결이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 해석을 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약관이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산출방법서에 기재된 사항)에 설명의무위반을 논한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찬동함.